

문화예술 대토론회

예술정책, 현장과 소통하다

2013.04.23 - 04.24

대학로 예술가의집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화예술 대토론회

2013.04.23 – 04.24
대학로 예술가의집

04.23(화)

예술 창작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 발제 20분(1명)
지정토론 60분(6명)
종합토론 40분

개 회	10:00-10:20	개회식 및 인사말씀
제1주제	10:20-12:20	예술 창작 활성화 방안
사회자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발제자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김 근	시인
	김희영	금천예술공장 총괄매니저
	류기형	(사)마당극패 우금치 예술감독
	박상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길	한국예총 기획정책본부장
	진옥섭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
제2주제	13:30-15:30	예술시장 성장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사회자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발제자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토론자	김경훈	예감 대표
	김선정	큐레이터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이희진	한국민예총 이사
	최석규	아시아나우 대표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대표
제3주제	16:00-18:00	예술향유 및 생활 예술 활성화 방안
사회자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자	라도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지평	한국예총 감사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백 령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조용태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예술정책, 현장과 소통하다

04.24(수)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조성

※ 발제 20분(1명)
지정토론 60분(6명)
종합토론 40분

참석대상: 총 120여 명
-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 예술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종사자 등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제4주제	10:00-12:00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제고
사회자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발제자	이선철	웅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자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민병주	한국예총 정책연구실장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은진	문화예술협동조합 연구원
	허인정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대표
제5주제	13:30-15:30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지원
사회자	김희정	상명대 음악대학 뉴미디어작곡과 교수
발제자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
토론자	나도원	음악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준비위원장
	박호빈	댄스씨어터 까두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이사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전시기획자
	전성태	소설가
	황의철	한국예총 사무총장
제6주제	16:00-18:00	예술을 통한 문화 간 소통 활성화
사회자	주일우	문학과 지성사 대표
발제자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토론자	김강곤	충북민예총 국제교류위원장
	마뽀알염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대표
	원영오	극단 노들 대표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조근상	한국예총 감사, 양평예총 회장
	최금수	네오룩 이미지올로지연구소 소장

문화예술 대토론회

목차

- 07
제1주제
예술 창작
활성화
방안

양 현 미 상명대 교수

- 17
제2주제
예술시장 성장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이 규 석 서울문화재단

- 31
제3주제
예술향유 및
생활 예술
활성화 방안

라 도 삼 서울연구원

- 45
제4주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제고

이 선 철 용인대 교수

- 59
제5주제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지원

오 세 곤 순천향대 교수

- 67
제6주제
예술을 통한
문화 간 소통
활성화

최 준 호 한예종 교수

예술정책, 현장과 소통하다

문화예술
대토론회

04.23^(화)
예술 창작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제1주제

예술창작 활성화 방안

양 현 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과 창조경제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예술정책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 중 비영리 영역에서의 예술창작과 관련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정부의 문화정책을 특징짓는 두 가지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다. 창조경제¹⁾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를 특징짓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문화융성은 이러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져오게 될 성과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창조경제를 만들어 내는 창조산업의 하나이다. UNCTAD는 창조산업을 “창의성과 지적 자본을 일차적 투입요소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제작, 유통의 사이클”이라고 정의한다.²⁾ 창의성은 문화적 창의성, 경제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기술적 창의성이 있으며, 창조산업은 문화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가지 창의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창조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UNCTAD는 기존의 분류 모델을 토대로 창조산업을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적 창작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예술은 “순수하게 문화와 예술에 근거한 창조산업으로 예술작품은 문화유산(heritage), 정체성 가치(identity values), 상징적 의미(symbolic meaning)에 의해 영감을 받으며, 크게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로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³⁾

예술은 예술상품과 예술서비스를 창작, 제작, 유통, 향유하는 가치사슬체계를 갖고 있다. 창조경제론의 특징은 창작과 제작의 구분이다. 소설을 창작하고 소설책을 제작한다. 회화를 창작하고 전시를 제작한다. 희곡을 창작하고 연극공연으로 제작한다. 이 과정에는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제작자, 무대기술자 등 다양한 예술인력들이 관여한다.

1) 새정부에서 창조경제는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경제의 개념적 정의는 발표자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계에서 사용해 왔던 창조경제 개념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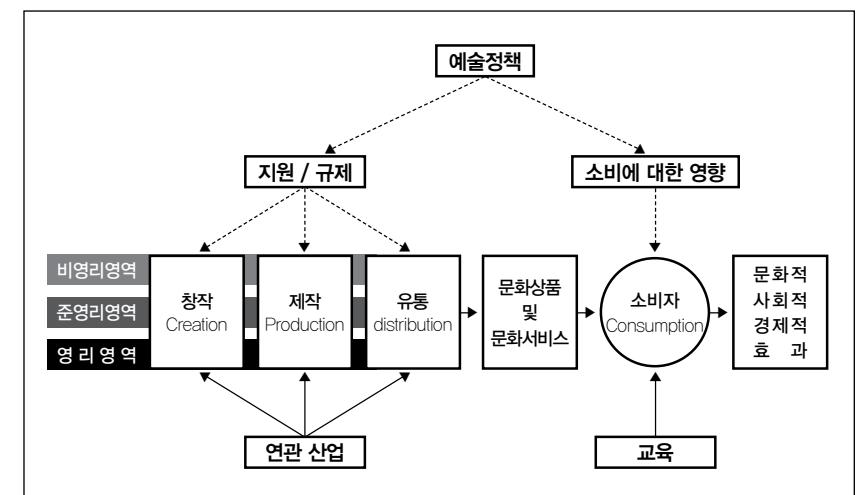
2) Creative Industries are the cycles of cre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use creativity and intellectual capital as primary inputs.

3) UNCTAD(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다양한 가치이다. 예술은 크게 예술 고유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예술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술이 교육, 건강, 사회통합,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국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문화통합을 위한 다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영역으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또한 예술은 판매와 거래의 대상으로서 예술시장은 예술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예술의 비영리, 준영리, 영리 영역을 형성한다. 현재 준영리 영역은 아직 뚜렷하게 구분될 만큼 양적 규모를 갖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공부문의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술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이다.

이와 같은 예술의 가치사슬체계와 예술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술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관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예술정책 영역에서
예술창작의 위상과
과제

예술정책은 이러한 예술계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통해 예술이 갖는 다양한 가치가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새정부에서 문화예산 2%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예술계에서는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술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계를 고려할 때, 예술정책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정책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영역을 고려할 때, 예술창작 활성화 방안은 예술적 가치(비영리 영역)의 창작/제작 영역 중에서 예술인 복지를 제외한 예술창작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표〉 예술정책 영역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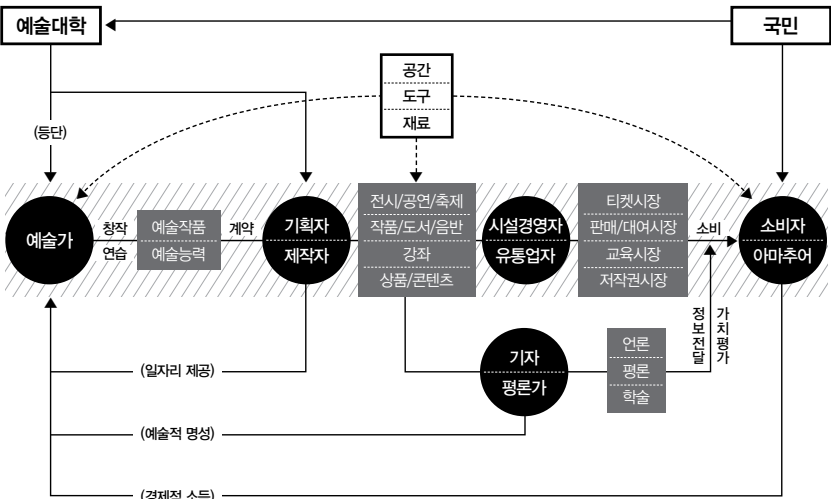
	창작/제작	유통	향유
예술적 가치 (비영리 영역)	예술인 복지 예술창작 지원	전문예술공간 국제예술교류	소외계층 예술복지 예술향유 생활예술
사회적 가치 (준영리 영역)	사회적 예술 창작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 예술 유통 탈 전문예술공간	예술교육 예술과 건강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예술을 통한 문화통합
경제적 가치 (영리 영역)	예술시장 인력양성 예술융복합산업	국내예술시장 국제예술시장	예술기반 기업경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예술창작 지원이라는 정책영역은 예술정책의 출발점이자 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정책을 펼쳐 온 영역이다.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예술향유 영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예술창작에 대한 공공투입의 절대적 양은 늘어났지만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예술계 일각에서는 예술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예술 향유와 예술의 사회적 활용이 늘어난 만큼 이로부터 수혜를 받는 계층이 예술인들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예술인들이 이를 상대적 박탈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영리 영역에서의 예술창작과 제작에 대해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과 제작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예술 가치사슬체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전제가 되는 도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예술창작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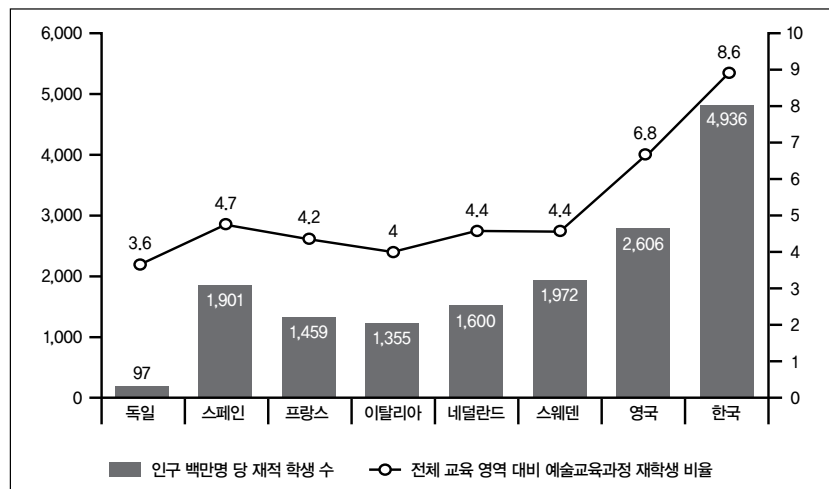


1 예술인 양성

국민 중 일부가 예술인이 된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창작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은 크게 좁은 의미의 예술인(창작자, 실연자), 예술기획자(기획자, 제작자 등), 예술경영인(시설경영자, 화상 등), 예술기술인(무대기술자, 보존과학자 등), 예술교육자, 예술평가자(기자, 평론가, 이론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들을 주로 길러내는 것이 예술대학이다. 그런데 양질의 예술인력이 필요한 만큼 양성되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이 과잉 배출되고 있다. 국가별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 명당 재학생 수가 유럽에 비해서 3~4배 정도 많다. 유럽의 예술향유율이 우리나라의 3~4배 정도 된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예술시장은

작은데 예술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2) 예술인력도 주로 창작 및 실연을 위한 인력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다. 예술기획 및 경영인력은 1980년대 이후 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산되어 왔고 최근에서야 학부에도 관련학과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고학력 고실업군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좋은 일꾼이 없고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러한 미스매칭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3) 예술평가인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예술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가지 가치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된다. 예술성은 예술이론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예술기구나 예술평론을 통해 예술계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예술의 질적 발전에서 중요한 가치평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예술대학이 종합대학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고 대학평가의 핵심지표인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 예술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가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다. 예술대학은 학비는 비싼데 비해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 예술인력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예술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며 문화부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3〉 국가별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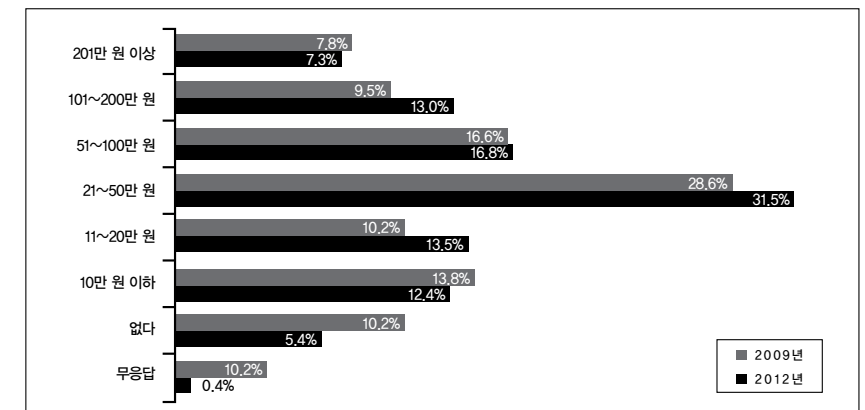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2 창작공간과 장비

예술인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술가가 창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생각해 보자. 2012년도 예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액은 2009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68.6%이다. 문화예술 관련 수입이 없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다. (1) 우선 창작공간이다. 문학이나 미술은 작업실을 운영해야 하고 공연예술은 연습실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작공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현재 창작스튜디오 정책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는다. 예술인에 대한 일반적인 창작공간의 수요 공급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창작에 필요한 장비는 예술장르에 따라 다양하다. 피아노, 물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연에 필요한 의상, 예술의 디지털화 경향에 따른 장비 등은 창작 및 제작비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활동 시 디지털 매체 이용률은 88.1%에 이르며, 새로운 매체를 통한 작품 발표율도 31.1%이다. 창작지원금이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창작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향유를 전제로 한 제작과정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포함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창작에 필요한 장비는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예술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그림 4〉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출처: 2012 예술인실태조사

3 창작/제작 지원금

예술정책의 핵심은 창작지원금의 분배이다.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금 수혜비율은 공공부문 27.7%, 민간부문이 8.1%로 예술인의 31.9%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19.2%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금 수혜비율이 늘어났다. 문화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 수혜비율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과제이다. (1) 창작지원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문화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에서 예술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에 대해 매칭을 요구하게 될 텐데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예술정책에서 정부와 지자체, 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창작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되기도 하고 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이 매우 복잡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매번 바뀌는 지원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창작지원금을 받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즉 민간을 통해 예술이 구현되고 이를 국민이 향유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안정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창작지원금이 전달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3) 국정과제를 보면, 문화에 대한 민간투자 및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메세나지원법 제정도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 메세나지원법은 주로 개인과 기업의 예술지원에 따른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전제이다. 그러나 현재 예술계에 제공된 세제혜택 수준을 고려하면 혜택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지원에 따르는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제도가 해결된다고 민간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술계의 자구노력과 예술계의 재원조성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5〉 지원금 수혜비율

지원처	2012년	2009년	2006년
중앙정부(a)	3.1%	1.6%	1.8%
지방정부(b)	14.3%	8.1%	8.8%
문화예술위원회(c)	11.8%	4.0%	6.6%
기타 공공기관(d)	5.7%	2.0%	2.6%
기업(e)	3.5%	1.3%	1.9%
개인(f)	5.5%	3.2%	4.1%
정부(A) A=a+b	15.9%	9.0%	10.2%
공공(B) B=A+c+d	27.7%	13.1%	16.4%
민간(C) C=e+f	8.1%	4.1%	5.2%
전체(D) D=B+C	31.9%	15.5%	19.2%

출처: 2012 예술인실태조사

4 예술단체

마지막으로 예술단체 문제이다.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전문예술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39.8%이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제도가 있지만, 예술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예술법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술계에는 여전히 임의단체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술단체 중에서 일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부에서 문화법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단체의 운영을 지속가능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예술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성을 고려할 때, 또한 민간재원의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의단체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예술정책에서 풀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덧씌우는 것은 현장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문화법인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도의 수용자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술계와 예술정책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하여

예술인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불만이 2009년 50.3%에서 2012년 63%로 높아졌다.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인 의사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불만이 50.1%에서 52.5%로 높아졌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이 해야 할 일로 정실주의, 부패청산이 2009년 26.0%에서 2012년 31.6%로 높아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술정책이 예술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예술계에서는 정실주의와 부패가 더 늘어났으며 그 결과 예술정책에 대한 실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나도 지원해야 할 곳에 지원하지 못하고 지원해도 공정하지 못하면 불만은 더 늘어나게 된다. 과연 이러한 현재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새정부에서 맞이한 좋은 기회가 예술정책에 대한 예술계의 만족으로, 더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예술정책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술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술계와 예술정책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하여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예술정책은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였지만 장르별로, 가치사슬별로 보면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모두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술정책이 아니다. 예술정책은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책임을 갖는다. 예술계가 자율적,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은 언제나 있다.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다. 자칫하면 모든 영역에 공공재원을 뿌리고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고만고만한 사업들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작 현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재원을 더 큰 공공조직과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될 우려도 있다. 발표자는 새정부가 정부의 정당한 공적 역할을 위해 작은 정부라는 구호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

문화예술 대토론회

04.23(화)

예술 창작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제2주제

예술시장 성장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이 규 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시장환경과 예술정책의 몇 가지 유형들

근대 이후, 예술과 시장은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공존하고 있다. 긴장감의 근원은 예술의 속성과 시장의 체계가 빚어낼 수 밖에 없는 불협화음에 있다. 본래 예술의 속성이 인간 행위의 가장 주관적 영역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 시장의 체계는 삶의 제반 조건들을 최대한 객관화 혹은 계량화시켜 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그 후계자들은 근대 이후 예술이 팽팽한 긴장관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체계에 무력하게 편입되어 버린 현상을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이라 명명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예술의 속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혹은 영역을 비영리예술, 기초예술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예술정책의 본질은 시장체계의 무한증식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술과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 조정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예술정책은 문화산업정책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문화경제학의 논리는 예술이 구조적으로 ‘시장실패’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내적, 내수시장의 관점에서 예술의 시장실패 요인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이 예술시장 정책이라면 대외적, 수출시장의 맥락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가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술시장과 해외진출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연관된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인 셈이다.

‘예술시장과 해외진출’ 정책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민간 자율성과 규모의 대내·외 예술시장 유형

미국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단일 예술시장으로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영어권 내수·해외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유통—향유 생산요소 상호간 민간 자율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예술시장에 대한 공적지원과 개입 정도가 최소화되어 있으며 공적지원은 민간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공되는 한편 직접지원보다 세제혜택 등의 간접지원을 통한 예술시장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강력한 공공지원—내수시장, 그물망 지원체계—중규모 해외시장 유형

이 유형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두 나라는 예술시장의 공급과 유통 부문에 대한 강력한 공적지원 시스템과 법제화된 예술인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실패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영어권 시장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각각 ‘불어권 예술시장’과 ‘독일어권 예술시장’과의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내수·해외시장의 역동적 호환성은 본국과 해외시장을 촘촘하게 연계해 주는 킬투르 프랑스(Culturefrance, 舊AFFA),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등의 그물망 지원체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작동되고 있다.

보편적 공공지원—영세한 내수시장, 수출지향적 해외시장 정책 유형

캐나다와 호주는 대내적으로는 예술공급 및 수요가 매우 영세한 내수시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영어 및 불어권 예술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내수 부문에서 예술시장의 공급 총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타 국가 대비 보편적이고 충분성이 확보된 공적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충분한 수요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어 및 불어권 중심부 시장을 비롯한 수출지향적 해외시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그물망 지원체계가 없는 대신 통상정책 차원에서 아트마켓, 수출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술시장 및 해외진출 현황

앞서 언급한 유형별 예술시장 환경과 정책모델은 근대 이후 각각의 예술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술의 구조적 시장실패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공적 지원과 사회적 투자가 누적된 결과물인 셈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예술시장 형성과정은 불과 최근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1999년까지 의무화된 예술단체 등록 및 창작활동 사전심의제도의 영향으로 예술공급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억제되고 있었다. 역으로, 예술단체 결성 및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허용된 2000년 이후 예술공급(예술단체의 조직과 예술창작 활동)은 급격한 팽창과정을 겪게 되었다.

유통 부문에서도 전체 공연장 시설의 65.9%, 전시시설의 67.1%가 2000년대 이후 설립되었다. 또한 대표적 문화향유 정책인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된 시점은 2005년이다.

지난 10여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예술공급 총량에 비해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인 지원제도는 ‘소액 다건’으로 상징되는 공급의 양적관리 정책으로 대처, 예술현장의 공적지원 의존도와 예술시장의 영세성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로서 예술시장의 척추에 해당되는 유통 인프라는 불완전한 매개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문화예술교육의 공식적 수혜를 받기 시작한 향유자는 아직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능동적 문화향유 계층에 편입하려면 6년쯤은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본격적인 예술시장의 형성기간이 지난 10여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예술시장의 현재적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2010년 기준 공연시장 현황

- 공연시설 820개 (민간 53%, 공공 47%)
- 공연단체 2,214개 (민간 87%, 공공 13%)
 - 공연시설은 전년대비 6.2%가 증가하였으나, 공연단체는 9.3% 감소

- 공연시설의 65.9%, 공연단체의 43.1%가 2000년 이후 창설됨
- 공연예술 공공지원 규모 9,942억
 - 국공립예술단체 2,603억 / 국공립공연시설 건립 및 운영 5,616억 등 공공 부문 지원규모 8,219억으로 전체 지원의 82.6%
- 매출액 기준 공연시장 규모 5,493억 (공연시설 3,274억 / 공연단체 2,218억)
 - 국공립예술단체 610억 / 국공립공연시설 612억 등 공공부문 매출액 1,222억으로 전체 매출의 22.2%
 - 상위 5개 공연시설의 매출액이 전체의 20% 차지
- 공연장 평균 가동율 51.4%
 - 대학로 81.4%, 문예회관 34.2%

2011년 기준 미술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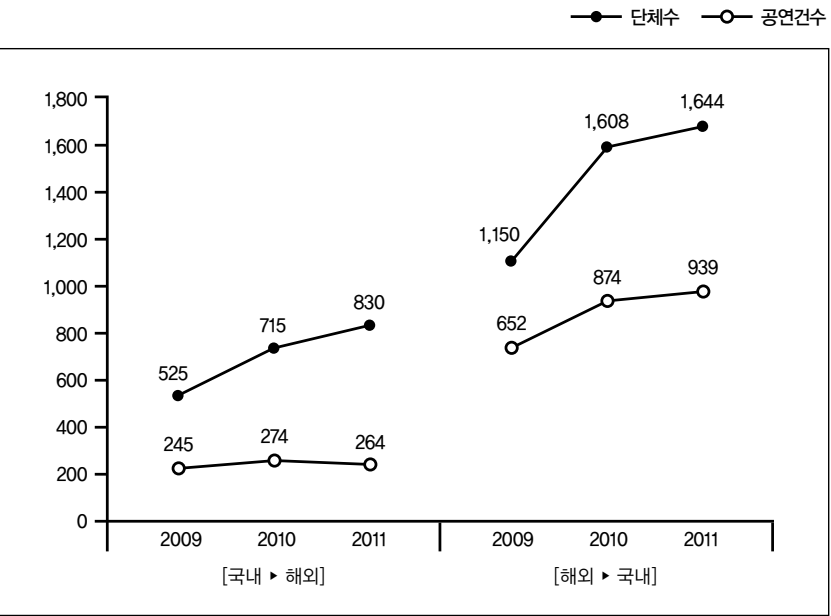
- 작품 거래액 기준 미술시장 규모 4,722억
 - 민간 4,209억 (화랑 2,963억 / 경매 782억 / 아트페어 464억)
 - 공공 983억 (건축물 미술작품 835억 / 미술은행 15억 / 미술관 132억)
- 주요 유통영역 현황 (민간)
 - 화랑 총 371개, 연간 5,341회 전시회 개최 1,074,551명 관람, 15,167점의 작품이 2,963억 원에 판매됨
 - 경매회사 총 14개, 연간 876회 경매 개최, 11,231점의 작품이 782억 원에 판매
 - 아트페어 36개 개최, 567,895명 관람, 860개 화랑 및 10,404명 작가 참가 / 총 7,119점의 작품이 464억 원에 판매됨
- 공공영역 현황
 - 건축물 미술작품 총 387건 설치, 작품설치 금액 835억
 - 미술은행 구입 작품수 267점, 구입금액 15억
 - 미술관 총 175개, 연간 1,896회 전시 14,549,680명 관람 1,387점의 작품이 132억 원에 구입되었음

1)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의 내용은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2011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2012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 유통영역 상위그룹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371개 화랑 중 11개의 화랑이 85.9%, 14개 경매회사 중 2개 경매회사가 56.3%, 36개 아트페어 중 5개의 아트페어가 66.5%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서양화 및 한국화의 작품 거래 비중 (화랑 67%, 경매 64%)
- 고객별 작품거래 비중 (개인판매 70%, 기업 11.7%)

2011년 기준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현황

- 2011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공연예술 단체의 국제교류 활동현황



〈표 1-2〉 2011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공연예술 단체의 장르별 국제교류 활동현황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단체수 (개)	공연건수 합계(건)	비율(%)	평균(건)	단체수 (개)	공연건수 합계(건)	비율(%)	평균(건)
전체	264	830	100%	3.1	939	1,644	100%	1.8
연극	40	130	15.7%	3.3	173	260	15.8%	1.5
무용	46	132	15.9%	2.9	130	199	12.1%	1.5
음악	80	267	32.2%	3.3	582	1,110	67.5%	1.9
기타	3	5	0.6%	1.7	54	75	4.6%	1.4
전통예술	95	296	35.7%	3.1				

〈표 1-3〉 2011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공연예술 단체의 대륙별 국제교류 활동현황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합계(건)	비율(%)	평균(건)	합계(건)	비율(%)	평균(건)
전체	80	328	830	76	939	1,644
유럽	32	111	367	31	445	791
아시아	24	129	265	19	241	387
남아메리카	16	21	70	10	36	57
북아메리카	2	40	74	2	140	270
아프리카	5	5	9	12	16	24
오세아니아	1	22	45	2	32	69
다국적				-	29	46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3년 62.4%에서 2012년 69.9%로 증가

〈표 1〉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예술행사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	(%)	(%)	(%)	(%)
전체	62.4	65.8	67.3	67.2	69.6
문학행사	4.0	4.4	4.0	3.8	6.1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2
서양음악	6.3	3.6	4.9	4.4	4.8
전통예술	5.2	4.4	4.4	5.7	6.5
연극	11.1	8.1	11.0	11.2	11.8
뮤지컬					11.5
무용	1.1	1.4	0.7	1.4	2.0
영화	53.3	60.3	58.9	60.3	64.4
대중음악/연예	10.3	7.6	10.0	7.6	13.5

※ 2012년 조사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 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 2006년 경제적 부담 30.3% > 시간부족 30% > 관심 프로그램 없음 18.2%
 - 2012년 관심 프로그램 없음 31.7% > 시간부족 21.6% > 경제적 부담 19.1%

- 가구소득별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 가구 26.9% 대비 400만 원 이상 가구 관람률 82%로 4배 가까운 격차를 보임
- 그러나, 관람률 추이면에서는 1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만 2006년 23.9% 대비 2012년 26.9%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2〉 응답 특성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65.8	67.3	67.2	69.6
도시규모	대도시	69.6	70.6	68.8	72.5
	중소도시	63.2	67.6	67.7	73.9
	군 지역	57.0	48.9	56.8	-
	읍면지역	-	-	-	52.7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	23.9	19.3	24.6	26.9
	100~200만 원 미만	54.7	48.3	46.6	46.4
	200~300만 원 미만	66.3	70.5	66.4	64.6
	300~400만 원 미만	79.6	79.4	75.3	77.3
	400~500만 원 미만				80.6
	500만 원 이상	86.0	80.6	84.7	83.5
					82.1
응답 거절		-	-	-	52.8
연령	10대	93.6	89.1	93.5	92.2
	20대	91.4	93.0	92.6	91.5
	30대	77.7	80.5	78.5	84.9
	40대	64.7	67.1	70.1	75.9
	50대	43.8	46.1	51.3	54.9
	60대				39.7
	70대 이상	24.7	26.7	28.6	21.0
					30.4

※ 2012년 조사에서는 표본설계 방식의 변화로 군 지역을 비교할 수 없음
※ 2012년 조사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연령을 세분화함

- 문화공간 이용률 중 문예회관 이용률 2003년 11.6%에서 2011년 6.6%로 지속 하락

정책개선을 위한
분석과 제안과제

‘수요-공급’ 및 ‘내부시장-해외진출’ 정책 연관성의 부재

총괄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내부시장 및 외부시장(해외진출)을 구성하는 각 생산요소간 연결고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급부문에 해당되는 예술창작활성화(예술지원) 정책과 수요부문인 문화향유(문화예술교육, 문화바우처 등) 정책 상호간 연결고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각 독립적인 실행체계로 작동되고 있다. 단선적으로 보자면 현행 공급-수요 정책은 정책대상(예술현장과 향유자)과 재원(예산·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공급-수요 정책의 이원화된 구조가 적절하게 연결, 조정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유통 메커니즘의 전문성과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공급-(유통)-수요가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작동됨으로써 내부 예술시장은 순환적 재생산 구조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내부시장의 성숙·확장에 따른 외부시장(해외진출)으로의 자연발생적 발전경로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분립 운영되고 있는 ‘공급-유통-수요’ 정책의 통합적 설계 및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가장 이상적인 방향의 하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재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 재원활용의 구조적 문제해결 차원에서 문화소외와 향유 영역으로 목적성이 제한되어 있는 복권기금의 포괄적 운영근거 마련

② 내부시장-외부시장 연계형 재생산 지원정책

- 현행 지원정책은 신작초연 중심의 일회적·소모적 관점에서 접근, 공급의 성과물이 축적되지 못하고 공급과 동시에 소멸되는 상황이며 레퍼토리 육성형 지원사업 역시 단순 재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수월성을 인정할 만한 창작성과물에 대해 ‘내부시장에서의 2·3차 유통계획, 해외진출과의 연계 재생산계획’ 등을 중기적 관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예술시장 성장 기반은 공급정책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

예술시장의 순환적 구조는 공급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정책의 크기와 중요도에서 공급은 유통 및 향유에 비해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과잉공급과 시장규모의 영세성을 지적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상은 적절한 수준에서 최적 상태의 예술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들이며 특히 민간부문 공급의 열악함은 그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가상승에 따른 예술창작비용의 자연 증가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평균 단가는 현상 유지되고 있거나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덧붙여 공급의 양적 위축과 질적 저하는 재정위기로 냉랭해진 수요정책과 맞물려 공급환경의 열악함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연시장의 민간 공급주체는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연예술 분야 공적지원의 82.6%인 8,219억 원이 공공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예술시장으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 공급의 양과 질에 대한 지원정책이 적절한 수준에서 재설계되어야만 예술 시장이 순조롭게 순환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성장의 기반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① 예술인 복지제도의 내실화 —예술시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전선 정책과제

- 공급 환경의 열악함은 물적 토대의 영세함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급의 인적주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임
-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공적지원이 인건·경상비에 대한 엄격한 제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재생산 구조는 보편적 예술인 복지제도의 건실함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사회보험제도

와 연계된 예술인 복지 모델로 단기간 내에 전환되기 어려운 정황을 감안한다면 예술인복지금고(기금)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 필요

② 민간 부문 공급정책에 대한 지원방식의 적절성과 지원규모의 충분성 확보

- 공공 대비 민간부문에 대한 공급정책의 지원규모는 지나치게 왜소한 현실, 적절한 수준으로 민간 부문 공급정책의 지원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양적 측면의 충분성 확보 못지 않게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단년도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단체 중심의 다년간 지원제도’로 패러다임 전환 적극적으로 검토
- 민간 예술단체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정책을 ‘사회적경제’ 맥락에서 실효성있게 재구성

유통체계의 매개 전문성 확보가 관건

우리나라 예술시장의 특성상 공급부문은 민간 주체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문화기반 시설 중심의 유통영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중간자적 존재로서 유통 메커니즘이 공급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선택과 조절 기능이 취약하고 능동적 수요창출의 촉매제 역할도 미흡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우리 예술시장의 공공부문 유통주체들은 공급과 수요의 행간에서 수동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공급과의 연결망은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문화바우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같은 외부적 수혈장치로 연명하고 있다.

링거액의 착시적 효능은 현재의 통증을 망각하는 데 있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건강성을 회복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술시장의 순환적 건강성이 체질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유통체계가 자율적으로 매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① 유통영역 공공 부문의 민간 전문성 참여구조 확대
 - 공공부문 문화기반 시설 운영체계를 기존 ‘공공 설립 및 운영 독점구조’로부터 ‘공공 설립 및 민간 운영 협력구조’로 민간 전문성 참여구조 확대
 - 문화거버넌스,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민간 주체들이 공공부문 유통영역에 협력적 컨소시엄 방식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② ‘전문인력 양성-고용창출’ 연계형 모델 개발
 - 예술경영아카데미,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인력지원사업 등의 단위사업으로 분절화된 체계를 통합 운영모델로 전환
 - 가칭 ‘문화예술 인적자원 개발센터’ 형식으로 예비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예술현장에 적합한 고용창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무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경력개발 과정 체계적 지원 등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 있음

능동적 수요창출 정책과 복지적 문화향유 정책의 포트폴리오적 설계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 계층의 문화향유율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 청소년·청년세대와 중위소득 계층의 문화향유율은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효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현될 것이라는 예측과 문화나눔, 문화바우처 정책의 실행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시혜적 문화향유의 성과가 능동적 문화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위소득 계층이 향유 영역에서 일정한 소외현상에 봉착해 있는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 현상은 복지정책의 차상위계층 딜레마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① 사랑티켓 지원제도를 변형한 ‘가족문화 바우처’ 제도의 신설
 - 중위소득 계층의 대부분이 가족 공동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와는 달리 가족 공동체 단위로 문화향유를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신설
 - 기존 사랑티켓 지원제도를 확대, 재편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임
- ②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세액공제
 -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문화예술 분야 소비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중위소득 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 능동적인 문화수요 창출 및 문화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제도설계의 방향에 따라 저소득 계층이 시혜적 문화향유에서 능동적 문화수요 단계로 편입되는 경로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상위소득 계층의 기존 문화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유도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임

단일하고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와 교류 편중성의 극복

2012 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 분석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은, 첫째 다년간에 걸쳐 해외진출 대비 국내수입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둘째 해외진출 시 교류 지역과 장르의 편중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류 지역 편중성 문제의 경우, 유럽·미국·일본·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정적 해외진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해외진출의 경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과 함께 개별 예술단체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신규 해외진출 채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르 편중성의 문제 역시, 언어문화적 장벽에서 자유로운 음악, 무용 장르의 선도 현상과 더불어 연극 장르의 부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단일 장르, 개별 작품 중심의 단선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 우리 예술에 대한 수용도를 넓혀줄 수 있는 문화적 번역과정을 수반한 입체적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단일하고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 현재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는 한국문화번역원(문학), 예술경영지원센터(공연, 시각, 전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프로젝트 및 레지던시) 등으로 지원기관 및 장르별로 분산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국내에서 해외진출 지원기구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에 위치한 재외한국문화원, 코리아센터 역시 내부 지원체계와의 연결성, 국가·권역 간 통합성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킬투르 프랑스(Cultutrfrance) 운영 모델을 참고한 단일하고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2011년 발의 검토되었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

문화예술 대토론회

04.23(화)

예술 창작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제3주제

예술향유 및 생활 예술 활성화 방안

수목에서 리즘으로의 진화를 위한 제언

라 도 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정책

시작

‘문화로 열어가는 국민행복 시대!’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전 정부와 달리 정책의 초점을 국민에게 맞추었다는 데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대부분 예술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내세운 명분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요한 내용은 예술가 지원이나 콘텐츠 개발이었고, 그 성과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선순환될 것이라는 가정법이 정책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국민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새정부 문화정책의 비전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심은 국민행복 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이 행복하다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라는 잣대에 맞춰 그 성패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이고, 무엇보다 주목케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 시대적 코드와 일치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가족과 자기개발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시대에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은 그와 같은 가치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노령화와 1인 가족 중심으로의 변화, 여가시대의 증대, 폭발적인 미디어 소비량, 육체 자체가 기호화되는 시대 등을 고려하면,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이야말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코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말로 서야 타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건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Art in City’부터 ‘마을미술’, ‘문화바우처’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은 분명 국민의 생활 속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뚜렷이 국민의 행복을 낳았다는 아주 매력적인 결과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많은 국민들은 아직 예술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열악하게 가는 경제여건으로 인해 삶의 여유보다는 당장의 먹고 살 것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놓고 처절히 싸우

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애길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하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현 상태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과 이것이 최악으로 나쁘게 쓰였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이다. 정책은 민간(영역)에게 분명한 사인과 가이드를 부여한다. 그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빠른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인해 이상하게 정책은 꼬여 생뚱맞은 비판 속에 시달리게 된다.

문화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목표고 비전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현실론의 관점에서, 뿌리깊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일반 보편적인 국민—에게 있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정책입안자—는 항상 국민들에게 예술을 주고자 하지만, 국민들은 그 예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럴까?

누구나 알 듯, 그것은 우리의 삶—역사, 정체, 일상— 속에서 나온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우리의 것을 상실한 채, 서구의 것이거나 다른 것을 빌려 우리의 모습을 얘기(re-presentation)한다. 때문에 그것은 낯설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된다. 감상이 많이 늘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 되었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낯선 것이고, 또 그것이 서구의 것인 한 원본성(originality)이 서구에 있어, 서구의 것이거나 그로부터 들어온 것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예술은 항상 뒷전에 쳐져 있다. 국민들이 예술을 즐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단지 아직 스타일화되지 않은 우리의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이다.

물론, 여러 장르에서 우리 우리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형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싸이’의 세계화에서 보듯, 이미 우리만의 독특한 표현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이란 무엇인가란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얘기다. 예술이란, 대중적인 문화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이 정제된 어떤 것을 표현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론 신의 세계가 되기도 되고,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며 우리의 이성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예술에는 표현(presentation)이라는 표현 대신 그 앞에 ‘재’(re)가 붙어 재현(representation)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가 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술을 보아야 하고 즐겨야 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돌아가야 할 어떤 이성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 창조자의 영역이기도 하고, 내 품에 있는 절대적 이성이거나, 이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야 할 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토록 예술을 보도록 하며, 그 예술감상을 촉진하기 위해 그토록 그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라. 우리가 왜 ‘사랑티켓’을 나눠주며,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는가? 관객을 늘려 예술시장의 지평—범위(coverage)—을 넓히기 위해?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막상 국민들은 그 예술에서 감동—마음의 움직임, 이성(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지 못한다. 물론 직접 가 본 관객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지 않는 90% 이상의 국민은 아예 그런 기회를 갖지 않고자 한다. 그것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의 여유고, 향유(nobles)라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나 생활 범위 안에 두지 않으려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예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여전히 있는 자들의 여유라고 생각하는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얘기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보지 않으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독특한 미학과 스타일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서구의 원본성에 의존해

대다수가 서구의 원본을 감상하거나 추앙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왜 그들 국민들에게 예술을 보아야 하고, 향유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그들에게 예술을 관람하고 소비-감상하도록 ‘사랑티켓’을 나눠주고, ‘문화바우처’와 같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성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깨끗한 뭔가의 느낌을 가지라고? 왜,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변하고 있는 현실은

지적인 문제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라선, ‘무슨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고, ‘전형적인 책상물림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다. 심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우리 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정책의 현장으로 뛰어갔다. 예술을 주는데 보지 않는 국민, 그들이 문제되었을 뿐,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토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어떤 보고서에도 우리 예술의 현실이나 실태여건에 대해 따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술이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늘 안타까워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문제를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예술이 ‘예술이 갖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하는 항목’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논외의 문제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토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의 방식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정당하다고 주었던 것들, 그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가정법을 버리고, 새롭고 새로운 관점에서 봐 보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지난 한 해 난 매우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마을 속에서 다양한 꿈을 꾸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그 사람들은 어떤 세련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형상화하고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지역에서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예술동아리를 만들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 동사무소를 운영하며 마을극단을 만들고, 주민과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예술(장르)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필요나 자기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 세계 속에서 자신이 지닌 여러 욕망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었다.

예술이 기술적 능수능란함을 제한다면,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얘기하듯, 일차원적 상태에서 이차원적 상태로 진화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술은 기술적 수준은 낮다 하더라도 예술이 지닌 본연의 기능성을 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모여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나타난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생활예술은 장르예술과 다른 형태와 행위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장르로서의 예술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능성과 순수한 감성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표현 양식—스타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재현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생활예술은 기능성은 떨어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표현하고 우리네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술은 기존 장르예술과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르로서의 예술과 생활 속의 예술이 동일한 양태와 가치—재현양식—를 갖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실상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 문제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갖지 않는다.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이나 소수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데 주력하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 표현의 양태와 수단, 동기, 목적 등에 있어 장르로서의 예술과 생활 속 예술은 그 모든 궤를 달리한다. 그런 점에서 예술향유와 생활예술의 활성화란 문제는 다소 복잡한,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 지형을 제공한다.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문제

모든 장르의 예술을 어떠한 장애 없이 모든 국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들은 그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얻고, 일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 속에 예술이 있어야 하는 기초적 가정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현재의 예술 장르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그것은 낯선 존재고, 맥락(context)에 대한 설명 없이 다가올 경우 그냥 걸려 있는 개체(text)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상과 예술 사이엔 ‘거리’가 존재한다. 문제는 그 거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예술의 생활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응당 예술에 대한 잦은 접촉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예술이 경험재라는 설명과 관계없이 자주 보면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보다 쉽게 받아들이며, 그로부터 예술이 갖는 본연의 역할인 삶의 여유와 감동, 새로운 영감의 부여와 창조적 형태의 삶을 잉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달라진다. 국민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트레스나 욕망들을 푸는 게 더 중요하다. 더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런 점에서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민주주의란 관점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문화의 민주화는 특정집단에 소유된 문화를 다수의 계층이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품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입장료나 거리감을 줄이고, 모든 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다. 우린 최소한 이 정책 목표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 못지 않게 자부심을 갖고 정책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모형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삶의 질에 어떤 변화와 영

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물론 깊은 영향을 주고, 수면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왔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 속에서는 이미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그마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고 있다. 언제나 정책의 대상이었고, 수혜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스스로 주체로 서며, 생산자이자 창작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국민들 속에 나와 그들이 가졌던 욕망을 펼쳐보이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발표공간을 달라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싶다고, 아직은 어설피고 세상에 내놓기엔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봐달라고 애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은 선지자적, 문명론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가 아닌, 일상과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생산성을 담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곧,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 문제로, 예술시장의 확대에서 국민행복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이 국민행복의 관점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진 자산을 스스로 전시하고, 그 전시로부터 행복감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 무엇을 바꿀 것인가?

사실 이 문제, 쉽게 말해 예술지형이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론으로 들어가 ‘그럼 무엇을 바꿀 것이냐’로 들어오면 여기엔 매우 첨예한 논란이 발생한다. 그것은 정책의 대상이 바뀌고, 수단(매개자)이 바뀌고, 그 방식이 바뀌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바꿈의 진영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우리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의 정책은 주로 ‘균형’과 ‘평등’에 맞춰져 있었다. 다양한 계층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언제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우선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한 사업이 펼쳐졌다. 여기에는 물론, 그 사업비가 나온 재원의 문제도 한 몫을 차지한다.

‘문화소외’라는 표현은 현재까지 문화정책의 거친 표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말이야 이 보다 좋은 말이 없는 무척이나 적절한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말은 문화는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적 전제를 무시할뿐더러, 도대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개념은 단지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계층에서 문화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정책적 의미에 불과해, 도대체 이것을 전달해서 무엇을 얻겠다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상실시키도록 만든다.

문화의 문제, 더더구나 예술의 문제는 소외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모든 곳에는 문화가 존재하며, 그 속에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힘—관계 network—이 존재한다. 그것은 단지 문명론이나 미학적 관점에서 우수하고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문화가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예술이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코드라는 점만 인정한다면, 그 우수성과 보편성은 실상은 별개 아닌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책은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는 정책이 아닌, 쉽게 말해 누군가에서 어떤 보편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지닌 가치와 내재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존재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코드화하는 작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지형들이고, 공동체적 관계들이다. 그것은 주름처럼 펼쳐져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순간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다. 수목에서 리좀(rhizome)으로의 진화! 뿌리없는 식물처럼 여기저기에 산포해 나타나는 것들을 잡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문화정책이 예술을 통한 정제, 즉 오이디푸스 신화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과 내재성을 분출토록 하는 분열증의 ‘양띠 오이디푸스’(G. Deleuze)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때문에 그것은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단 개별성과 특수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무엇인가를 가져다주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대상 또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건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지역에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고, 뭔가를 잉태하는 사람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뿌리없는 식물’ (rhizome)들을 위한 정책

현재의 문화정책,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정당성의 게임이거나 당위성, 타당성의 논리는 아니다. 그것이 국민의 행복이라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횡수를 채우는 ‘산출지표’를 만들기는 쉽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가 변했다는 ‘결과지표’, 다시 말해 효과성의 지표를 만들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문화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 보편성-균형성을 취하는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화성-개별 사건과 움직임, 관계 등에 주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정책의 방향 면에서 예술서비스의 전달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어떤 흐름들을 기호화하고, 의미화하는 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를 어떻게 의미화-기호화할 것인가?

2005년 이후, 그간의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로또기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정책은 크게 한번 바뀌었다. 필자 또한 당시 예술지원이 갖는 역진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예술지원 사업이 작가 개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뭔가 목적성을 지닌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보다 ‘다양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소수의 관람을 위해 다수가 세금을 내 재원을 조성하는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필자의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문화정책은 바뀌었다. 단순한 창작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들어가 지역을 미학화하고 혁신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은 분명, 지역에 새로운 문화성과 예술성을 부여하고, 지역명에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 예술을 꿈꾼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위로부터 작가가 들어가 무엇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결과가 나와 의미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참석해 계시지만,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동네예술가프로젝트’는 그와 같은 것을 대표한다. 마을 내 동아리들을 찾고, 그들이 세종문화회관이라는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작은 동네에서, 말 그대로 동네에서 하던 일을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큰 무대에서 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그곳으로부터 보겠는가? 강호동이 새롭게 맡은 〈우리동네 예체능〉이란 프로그램을 보며, 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나는 작가들이 들어가 지역을 혁신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워크숍(workshop)과 같은 사업을 권한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기획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책이 필요할 때도 있고, 후원-협찬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담아 놓고,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센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활동단위를 도울 수 있는 헌신성과 전문성, 연결성 등이 필요하다. 그 스스로 기획자가 되어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뛰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나는 마을에서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광고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책이 없어 도

서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예회관이나 지역의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란 생각을 해봤다. 원 포인트 레슨이라도 받고 싶은데, 연습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는 분명, 우수한 예술가나 기획자가 들어가 지역을 혁신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압도적이었다. 물론 이 사업은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점차 사회는 수평적 네트워크, 즉 누군가 앞서서 가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름과 차이가 있는 자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끌고 혁신하기보다는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컨설턴트가 더 필요하고, 그들의 일을 도와줄 조력자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일을 엮어 진짜로 큰 일을 만들어 주는, 세상으로부터 그 의미를 각인시키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일이 절대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일, 예술서비스를 전국화하고 균형감 있게 제공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 일은 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각종의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 저기 산포되어 삐죽삐죽 올라오는 힘과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보전하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만 잘 된다면, 생활예술의 활성화는 충분히 또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마치며

뿌리없는 식물들, 각 지역에서 산포되어 나타나고 있는 잡다한 현상들, 그것을 의미화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국민행복이라는 의제 앞에 선 향후 문화정책의 핵심이라는 게 나의 주장이다. 나는 보다 더 위로부터의 관점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서야 하며 그런 점에서 문화정책의 틀이 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소외된 계층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 그런 지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치열한 경쟁과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면, 더 정확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이 더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취약계층에는 그 계층만의 문제가 있고, 그들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풀어나가는 방식을 도와주는 것일 뿐, 우리의 방법(tool)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나는 이들 계층이 사는 소외된 지역이나 취약한 지역보다는 지역의 상징적 거점이나 혼잡한 지구, 상업적 지역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지역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다. 예술은 기호화의 문제이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한 지역이 예술적 코드가 형성됐을 때, 그 지역은 높은 문화할인률(cultural discount)로 보다 쉽게 소비되고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그게 이루어져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보편적 시민들이 예술을 관람하고, 그들이 스스로 즐기는 문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회는 이미 다양한 생산성으로 충만해 있다. 문화는 이미 무언가를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생산적인 힘으로 진화한 지 오래다. ‘플래쉬 몹’을 하는 청년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의미없다고 외치는 그들은 그들 삶 속에서 정말 의미있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의미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우고, 더 다양한 것이 나타나도록 할 것인가?

‘뿌리없는 식물’(rhizome)은 가장 척박한 토양인 사막에서 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흙같은 아주 좋은 토양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단, 뿌

리를 내리지 않아도 좋도록 혹은 않도록!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는 어떻게 풀까? 오늘날 지역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동체들이 대부분 ‘탄압’(?)의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는 역설은 아마도 알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하고도 미묘한 답을 주는 것 같다. 이 답을 풀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

문화예술
대토론회

04.24(수)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조성

제4주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제고

이 선 철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들어가기

새 정부는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라며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문화융성을 3대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창조경제와 창의교육 그리고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과 함께 문화의 역할과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문화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창조경제를 이끌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문화의 본원적 가치와 함께 문화가 가지는 촉매이자 도구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전의 ‘문예진흥’이나 ‘문화발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한류의 열풍이나 예산의 증가가 융성의 실체인가? 이전의 구호들이 문화에 대한 가치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던 시대에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환경적으로 더 낮고 높고 좋은 상태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문화가 그동안 쌓아온 유무형의 기반 위에 사회 곳곳 다양한 영역에 촘촘히 스며들어 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며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문화가 단순히 문화계의 발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또한 문화가 사회적으로 ‘융성’한 단계나 상황 또는 수준이란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문화와 예술 및 관련 분야가 창작과 향유 또는 유통이나 교류 등에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예술가들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사회 취약계층까지 문화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으며, 산업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성숙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정해 볼 수 있다. 즉 문화가 정치나 경제, 복지, 교육 등과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가치와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특히 지역의 개발이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유무형의 자원으로 문화가 충분히 확보되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수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대도시만이 아니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동력이자 구심으로 문화예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의 동력으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있으며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생태와 지속가능성이 고려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통해 지역단위의 문화 활동을 위한 장려와 고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전제로 한다. 지역기반의 예술가나 단체들의 자생력이 지역으로부터 확보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해야 한다.

도시의 역사적 변천을 보면 과거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의 조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최근에는 시민들의 문화적, 복지적 측면의 질을 높일 수 환경을 강조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도시를 표방하며 이제는 도시가 얼마나 문화적, 창의적 활동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들의 문화 역량과 도시 전반의 문화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지 하드웨어적 측면의 물리적 시설 조성을 넘어 이들을 채워줄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확충, 그리고 구성원 간의 활동에 기반한 연대적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 중의 하나인 이른바 ‘도심재생’ 개념의 확산으로, 공장이나 창고, 폐교 등 유희시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이나 사업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론’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와 관련한 대표적 학자로 찰스 랜드리와 리차드 플로리다 그리고 마사유키 사사키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분야별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

들이 개별적인 이론과 그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 마케팅이나 장소 마케팅의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살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며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 또는 중요 행사의 개최 등 많은 방안들이 고민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 중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를 활용한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활성화 시도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공간의 조성과 문화기관의 증가 그리고 전문 인력과 재원의 확충으로 인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문화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른바 지역재생이라 하여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거나 생활 속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략과 성과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전략의 부재나 현실성의 결여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이에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며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 같이 도움이 되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성 그리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의 활용 방안을 열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의와 전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활용 영역

장소가치의 창출

공간은 모든 인간 활동의 물리적 기반이다. 특히 생활과 업무 공간 외에 문화 공간과 생태 공간의 확충이 도시와 농촌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에도 여느 도시 못지 않은 훌륭한 문화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 군마다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고 있으며,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대안적인 문화공간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복

지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등 일반 시설에서도 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 공함으로써 이른바 ‘문화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화 창작과 향유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단지 부동산적인 자산적 가치만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이 있는 그 자체가 곧 문화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야 실질적인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역의 수많은 공간들이 지역의 특성과 역량,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처럼 지어졌다가 운영난으로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도 보게 된다. 따라서 문화공간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성되고, 프로그램과 운영에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의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창의교육은 이제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과거 입시 위주의 경쟁적 환경의 교육이 여전히 지배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인성의 계발이나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문화예술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과거의 기능적인 예능교육이 아니고 체험과 과정을 중시하는 관객 및 주민 교육으로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문화향유의 경험이 별로 없는 농어촌의 특성상 일방적인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과 수동적 향유를 넘어 주민들의 문화 향유력을 키우고 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용이 절대적이다. 문화예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전반적인 인성 교육과 창의력 증진이 목적이니 만큼 어릴 적부터의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

출중한 재능을 가진 인재도 배려하며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보는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만

속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촌유학의 한 방편으로도 가능하며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용은 더욱 중요하다.

문화복지의 확대

문화가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거나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이 있는 애호가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구성원들이 문화를 삶의 도구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도 고려하는 선진적 사회에서 문화는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제한되거나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대상인 장애인, 재소자, 군인, 다문화 가정,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시대의 흐름상 다문화 가정이나 고령층에게는 문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같은 대상으로 여러 기관들이 중복해서 제공하는 데서 오는 난립성, 단순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행사 등은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대상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복지 전문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사회공헌이나 재능기부의 방향이 복지나 교육과 연계될 때 사회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소외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의 문화를 책임질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해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전문가들은 하루아침

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 분야의 특성상 전문가와 주민 그리고 행정의 함께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매개자로서의 지역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에서부터 그 적성과 관심을 파악하여 진로를 지도하고 지역에 있는 잠재적 인력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귀촌자나 이주자들의 전문 경력이 지역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축제의 진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가 최근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십 억의 예산이 드는 대규모의 관광축제나 전문적인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축제도 있지만 점차 소규모 마을단위의 농촌축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 마을축제가 자칫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나 연예인 초청 주민위문 공연 또는 마을사람들끼리의 잔치로 끝나는 현실도 있다.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하기는커녕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일괄 의뢰함으로써 주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마을의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즐기고, 도농의 교류와 소통의 계기도 되며, 장기적으로 마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이유 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 마을축제에 문화가 효과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문화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며 이를 응집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축제인 것이다.

관광의 다변화

농촌에서의 소득 창출의 원천으로는 영농과 가공 그리고 관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관광의 경우 과거 집단 여행이나 시설관광 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관광 프로그램에 생태적 환경과 함께 문화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체류의 시간이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젊은 층들에게는 문화적인 요소는 절대적인 흡인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계는 이제 지역관광의 영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때로는 관광의 도구로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생태관광과 문화관광, 착한여행, 공정여행 등 관광의 패러다임과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면서 관광이 개발이나 시설위주에서 지역사회의 장소성과 관계성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대중관광에 그 시장이 다소 미약할 수 있으나 이는 필연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의 보존과 계승

지역마다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 문화재 그리고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의 보존과 계승은 그동안 다소 홀대받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영역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성이 부족하거나 다소 경제성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전통의 보존은 이전까지 다소 홀대받던 인식을 넘어 최근에는 지역 기반의 콘텐츠나 정체성 확립의 수단으로 새로이 인식되면서 각종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거나 지역의 역사도시나 마을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가단위의 문화재들은 정부의 몫이라 하지만 지역단위의 활동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속에 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나 농악, 연희 등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쉽사리 끊어지게 되는 지역의 전통과 예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지역의 지적 문화적 자산의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전통예술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에 지역문화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가의 증진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의 발굴과 콘텐츠로의 개발 그리고 이의 활용은 자칫 일상에서 문혀 버리기 쉬운 자원들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특히 음식이나 주거방식, 생활양식, 디자인, 주민들의 정서적 기질 등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가 문화의 영역이자 자원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문화요소의 활용은 주민 자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 고취 그리고 대외교류의 일차적인 도구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회복의 매개가 되는 것이 또한 문화이다. 지역의 주민들은 언뜻 단순해 보이나 사실 그 기저에는 대단히 복잡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 이외에도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나 이익집단의 소속, 그리고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인 계모임을 통해 거미줄 같은 관계망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속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법과 세대가 맞는 매개체가 또한 문화이다.

예술가의 역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기여도 및 성과가 많이 강조되고 시도되어지면서 예술가의 활동영역과 시장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레지던스나 창작, 그리고 마케팅 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의 취약함을 공공의 구매나 지역에서의 활용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외부의 예술가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정주성을 높여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예술가들은 고전적 의미의 창작활동 외에도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공급, 지역 경제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참

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역의 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예술가들과 문화기획자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활동, 청년창업의 동력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시장의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기업경영

과거 후견(patron)이나 협찬(sponsorship) 등 선형적 지원의 성격이 강했던 기업의 문화예술의 참여는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예술계를 돕는 차원을 벗어나 주체적으로 직접 문화를 활용하는 영역이 많아지며 산업단지의 문화공간화나 근로자 복지의 도구(QWL), 사회공헌활동과 HRD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기업도 생산성 향상과 임직원의 경쟁력 그리고 근로복지의 수단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반증하며 이제는 오히려 고유한 사업영역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원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 및 전문가의 활용과 문화예술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의 농축수산업은 물론 각종 가공 산업 등 지역 경제의 매출증대나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소득 증대에 문화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디자인, 마케팅, 홍보, 교류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축제나 관광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의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높은 품질도 전제되어야 하지만 문화적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과 체계가 시급하다.

맺기

문화예술은 이제 지역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서 예술의 창작과 주민의 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수단, 그리고 나아가 지역개발과 산업 그리고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문화는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한번 인식에 자리 잡으면 비교적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유무형의 문화 자원에 대한 개발과 창의적 가공 그리고 대상의 특색에 맞는 활용 전략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사회 곳곳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 방안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드웨어의 조성과 소프트웨어의 장착 그리고 이를 운영할 휴먼웨어의 구축 등 거시적이며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정책과 사업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행정과 전문가 및 주민 간의 협업이 절대적이다. 사회의 다양한 관계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며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려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예술계는 전문적인 콘텐츠와 인프라 또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이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의 노하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필요하다. 예술은 돈이 안 되니 지원한다는 것보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시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지원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탈피하게 해야 한다. 큰 돈이 들거나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그 부처가 주도하고, 결실의 정점이나 핵심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식의 시스템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재소자에게 문화예술의 혜택을 주려면 법무부에 문화부가 프로그램 제공과 관계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마을회관의 건립은 농식품부가 하되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은 문화부가 담당한다든지, 보건복지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담당자의 기회역량을 문화

부가 담당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고 지금도 수행되고 있다.

문화는 그 사회적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의 규모나 인식의 부족 등으로 존재감이나 영향력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 당국도 틈새정책의 개발이나 결정적 요소의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종의 다윗과 골리앗 전략이나 화룡점정 전략, 엮어가기 전략 등이 그것이다. 문화와 관련된 일이라고 문화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관점보다는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지원이나 예술가 네트워크 활용,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의 시장진입,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나 여타 정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이나 시혜적 측면의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거미줄 같은 문화예술계의 생태계와 네트워크의 구축 및 소통과 협업을 위한 부처 간 채널의 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문화 예산의 문제가 거론되며 최근 예산 2% 확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질과 활용이 더 중요하다. 문화계 특유의 분야별 이기주의나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세금이 쓰이는 공공 지원과 정책 수단으로서의 사업들은 보다 전략적이고 현실적이며 현장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실질가치를 창출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부는 중앙정부의 다른 부처, 지자체와 민간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속성상 직접 다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또한 문화가 강조되는 것에 편승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조심해야 한다. 문화가 모든 것의 해결사이거나 최우선 순위는 아닐 수도 있다. 문화계 스스로의 이기주의에 빠져 일반 국민과 괴리되는 상황도 우려해야 한다.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가치에만 매몰되는 것도 위험하고, 경제적, 산업적 관점

에서만 바라보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나 목표들이 관련 분야 종사자나 전문가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쉽고 친근하며 구체적인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성과나 전문가들끼리의 관념적인 담론을 넘어 현장 지향적인 정책과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이 중심이 되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서로 호의적인 협업을 하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만 앞장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현란한 구호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상황의 인식 하에 서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제약을 파악하고 방식을 존중하며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접근과 태도가 필요하다. 진중하게 성과를 기다리고 꾸준히 투자하며 그 성과의 열매를 골고루 나누어 문화가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가 사회 여러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가치를 구현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언어와 매체를 통해 그 분야의 체계와 구조와 소통이 되어야 그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기본적인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납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방과 영역을 고려하여 친절한 활용전략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눈높이의 설득과 설명으로 꾸준히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

문화예술
대토론회

04.24(수)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조성

제5주제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지원

오 세 곤 순천향대 교수

들어가며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비록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귀한 불씨로 생각하고 잘 살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가 왜 예술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이다. 다만 아직은 모든 국민들이 예술과 예술인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므로, 또 아무래도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 제일주의 사회이므로, 그에 맞춘 홍보 문안이라도 있어야 하겠기에, 몇 마디 하기로 한다.

“예술은 비효율의 효율이 중요하며, 그렇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할 정도의 비효율적 도전은 다른 어떤 분야도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선사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은 예술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죽음의 고통에도 울지 않을 수 있고, 우는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울 힘조차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예술인이 죽고 예술이 사라진다면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제 시작은 했으니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담긴 의도

예술인복지법은 애초 시안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는 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예술인의 지위를 국가가 인정한다는 선언적 의미만이라도 확보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애초 시안에 담았던 내용도 이미 현실을 생각하여 상당히 타협적으로 절충한 것이었다. 새로 제도를 만들지 않고 기존 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기조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 그러고도 거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괜히 타 분야에 경계심만 부추긴 셈이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포함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존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보험 정도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건강보험 연체자들에 대한 해결책도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앞서 비효율의 효율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대목인데, 즉 옥석을 가릴 수 없으므로 모두 버리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거둔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 대비를 못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없어선 안 된다. 역시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이 있는데 어떻게 예술인만 노후 대비 대책을 마련해 주느냐는 논리는 도움이 안 된다. 현재 법에 명시된 예술인금고와 예술인공제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그 설계도 합리적이어야겠지만 고정된 명칭이 갖는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하여 사각을 없앨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적 한계를 말한다. 법 시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도 마련이 가능하다. 즉 4대 보험이라는 기존 제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신체적 안전장치와 노후 대비의 효과를 얻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례로 민간단체에서도 건강보험료 연체자를 구제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현 단계

첫 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이 실망스러운 건 다 아는 일이다. 용도가 특정된 적은 예산으로 노력의 여지조차 거의 없다는 불평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매몰되지 않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지만 수치적, 외형적 성과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기관 평가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한다지만 진정한 질적 평가는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그

럴 듯한 포장으로 외부 시선을 현혹하기보다는 마치 예술가의 그것처럼 자신의 까다로운 기준을 발동시키라는 것이다.

이에 있어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자면 예산이 책정된 사업의 수가 적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뭔가 새로운 것을 서둘러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우선은 정해진 소수의 사업만이라도 질적으로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존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세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예술인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협회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자칫 기존 협회들의 존재를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최초 법안 시안에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었다. 물론 일부 협회의 회원 가입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회원들의 예술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낭비적이다.

어떤 형식이든 이미 예술인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예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과거 이 기준에 혼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즉 이후 신규 예술인 진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엄격한 진입 기준을 세우되 완전히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활동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지원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 수년간 강조해 온 선택과 집중 정책과 함께 신진에 대한 소액 다건 지원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예술창작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예술교육 서비스를 펼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어떻게 협력할지도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장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기존 복지단체들과의 협업도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연극인복지재단, 영화인복지재단,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등 예술인복지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민간기구들은 한국예술

인복지재단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자칫 같은 일을 놓고 영역 다툼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그래서 기존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경우, 게다가 그렇게 많은 일을 떠맡게 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상대적으로 세밀함에 있어 기존 민간 기구보다 떨어질 경우 그 낭비와 폐해는 고스란히 해당 예술계와 예술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일반복지 대상자의 확대

재단은 현재 재능 나눔을 전제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마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로 나눔을 선택한 듯하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일자리 창출이냐 교육이냐 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지만 예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행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받는 이 사업은 그야말로 돌 하나로 여러 마리의 새를 잡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그 확대의 속도는 대단히 늦다. 전국의 초중고가 11,000개쯤 되는데 그중 60% 정도에만 예술강사가 파견된다. 그것도 한두 명 정도가 나가서 일부 학생들에게 예술의 맛만 보여주는 정도이다. 유치원은 더 심각하다. 단 한 번 시범사업으로 500개 원 정도 파견해 보곤 중단해 버렸다.

전국의 학교(유치원 포함)에서 모든 학생들이 1주일에 2시간 정도만 예술을 경험하게 하려고 해도 한 학교에 평균 최소 5명의 예술강사가 필요하다. 물론 기간제 교사 정도(주 15시간 내외)의 시수와 대우를 받는 수준의 강사들이다. 그렇게 되면 대충 6~7만 명의 예술강사가 필요하고 순환주기를 20년으로 한다 할 때 매년 3,000~3,500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필요한 규모이다.

또 같은 규모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답당은 각 지자체별 공립예술단과 전속예술인, 그리고 기초단체별 연고예술단체와 연고예술인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에 더해 대학 캠퍼스에 상주하며 교육을 돕고 창작의 편의를 제공하는 캠퍼스 상주예술인과 상주예술단체 제도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중심에 놓는 예술가와 예술창작을

중심에 놓는 예술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업과 같은 맥락이다. 즉 문화부이건 재단이건 복지와 관련된 일의 범위를 여기까지 확대하여 교육부도 설득하고 각 지자체도 설득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재단의 또 하나 사업은 예술인들의 취업 역량 강화이다. 예술로 갈등 조정도 하고 예술로 IT 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분명 옳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단시간에 예술인들을 교육해서 다른 분야와 융합을 시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타분야 전문가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다. 마치 어떤 장르의 예술인이 다른 장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 다른 장르의 예술인이 아이디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회적으로 예술이 아이디어 생산을 필두로 하여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단히 유용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런 뒤 당분간은 아이디어 회의 등에 예술인 파견을 지원해야 한다. 그 효과가 입증되어 타 분야가 예술인 초빙을 당연시할 때까지 계속 계몽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다. 어느 세월에 그 복잡한 과정을 밟느냐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냐 하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몇 명에게 취업 교육을 시켜 몇 명의 실질 취업을 성사시켰다는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성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일은 왜곡되어 실질 효과는 없고 수치만 남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나가며

복지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다. 예술인과 복지라는 단어의 연결은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에 있어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당연하다. 마치 국방을 위해 군인을 중요시하듯이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서 예술과 예술인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기존 단체나 기관들과 불필요한 영역 다툼을 벌이며 낭비만 초래할 위험까지도 있다. 당장 작년 편성되었던 수준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포장하지는 말기 바란다. 그보다는 애초 세운 마스터플랜에 맞춘 최소 조건 충족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증액이라는 말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예술은 정말 까다롭다. 마치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처럼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지표이다. 이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보고서상의 성과만 있고 실제 수질 오염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는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일을 주장하고 선도했던 예술인과 예술단체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한 국회와 정부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디 이 일이 공익을 위해 기꺼이 나섰던 사람들이 두고두고 칭찬받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

문화예술
대토론회

04.24(수)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조성

제6주제

예술을 통한
문화 간 소통 활성화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들어가며

‘예술을 통한’, ‘문화 간’ ‘소통 활성화’라는 거대한 주제를 엮는 글을 훌륭히 써낸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의 중요한 명제인 이 주제를 둘러싼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를 삼고자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가 예술을 만나는 순간만은 모든 사회적 차이가 의미를 잃게 된다. 본 주제는 폭이 넓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화두를 던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예술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 마구 혼용되는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한 정리,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의 가치, 문화적 소통을 위한 예술의 역할 등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한된 지면과 준비 시간 등의 이유로 본고는 긴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과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됨을 미리 알려드린다.

문화, 문화다양성은 무엇인가?

우선 문화에 대한 생각부터 조심스레 정리하겠다. 문화는 유행이나 산업과 달라서, 향유하는 대상이 성별과 세대를 초월하며, 그 생명의 길이가 길고, 일부 계층이나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공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성격으로 특징지워진다. 즉,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문화가 삶속에서 향유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유행이나 정치적인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기보다는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며, 한 사회 구성원 공통의 의식과 역사성의 발현이라고 하겠다.

샤머니즘과 유교적 사회의 관습에 담긴 문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정착된 문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문화 등은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방식, 사회와 삶의 목적, 사람들 간의 관계 등을 변화시켰다. 결국 무속과 최첨단 과학, 여러 종교, 봉건적 사고와 자유주의 등에서 비롯된, 서로 양극단에 있는 문화들이 묘하게 공존하면서도 극단적인 충돌이 없는 사회문화가 형성된, 세계에서 희귀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작은 갈등이 부각되기만 하면 이런 혼합적 문화의 차이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각성을 키우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빔밥 문화라 일컬을 수 있는 우

리의 다양한 문화적 혼재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키웠기에, 매우 독특한 역동성과 시너지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2013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각각 꽃피우고, 또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보다는, 세대, 빈부, 지역, 인종,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을 키우고, 대립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중문화, 소비적인 문화가 우선되면서, 이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소외되고 마는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현상이 눈에 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란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아 공존하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어울려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삶의 가치가 살아 있기에 더욱 풍요롭고 넉넉한 사회를 만들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 간의 소통’이란 문화다양성의 보장,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존중,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가치 공존 등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반을 만들고, 다문화 간의 조화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하겠다.

예술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향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

우선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자. 실용주의, 시장중심주의, 초고속 집단적 소통의 일상화, 소비지상주의적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20년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삶은 더 편리해졌고, 이전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보도 넘치는,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 불행히도 이러한 현대사회적 조건들은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던 경제 양극화, 보편적 복지 의 결여,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 취업난과 같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했다. 출산률, 자살률, 취업률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과연 이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일까? 이들 대부분은 표면적으로는 현실적, 물질적인 문제에 기인하지만, 더 어려웠던 과거 시절보다 우리가 더 위로받거나 격려받지 못하고, 더 큰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에 다분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짧은 시간에 이룬 물질적 성장이 혹여 우리를 황금만능주의의 포로가 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경제와 권력의 미망이 우리를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가 각각 위로 향한 경쟁을 함으로써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피라미드 구도의 위, 아래로 매겨지지는 않았는지? IT 정보화 시대로 인해 대다수가 유행을 따르는 듯이, 우리 사회의 집단 의식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란 말의 실체는 무엇인지? ……

이때야말로 물질과 권력을 향한 일상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예술의 향유가 필요하다. 예술은 우리 개개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지적, 시각, 청각, 체험적 세계를 창조해 내기에, 이를 만나는 관객들도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작품들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우월적 왕도도, 정답도, 차별도 없다. 서로 다르기에 존중받는 예술처럼, 우리 개개인이 서로 다른 예술과의 만남을 통해서 각각의 가치들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과 열정이, 다르기에 더욱 풍요로운 가치들을 서로 이해하고 경험하며 사는 넉넉함이, 각자에게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 일상과 다를수록 좋고, 익숙하지 않은 가운데 낯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와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할수록 좋다. 혹여 집단 대중이 선호한다고 해서, 돈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을 좇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일상의 스트레스를 되받을 뿐, 예술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신선한 공기를 잃고 말 것이다. 예술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고, 그 풍요로운 결실을 전국민이 향유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서로 다름이 존중받는 가운데, 조화롭게, 평화롭게, 즐거운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일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즐겁게 하면서도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예술을 체험하고, 일상적으로 향유함으로 해서, 한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소통 기반이 형성된다. 서로 달라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듯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다름이 주는 풍요로움이 결국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술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술을 통’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넓게는 예술이 이벤트로서나 특별한 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향유되고, 창조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12년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국민의 연간 예술관람 횟수는 4.9회로 나타나고, 그나마 영화(연 3.6회)를 빼고 나면 평균 연 1회 예술을 관람할 뿐이다(문화관광연구원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일상적인 예술향수와는 아득히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예술활동(커뮤니티 아트)’을 장려하는 일들이 눈에 띄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칫하면 이 역시 극소수인들만의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다. 한두 번 학예회에서처럼 가족과 이웃이 동참할 수는 있지만, 심정적인 것일 뿐 지속성 있는 진정한 예술 향유의 증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예술 무관심자가 애호가가 되기까지의 단계가 있고, 이것이 현실화될 때에 예술창작과 소비가 이뤄지는 예술생태계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여러 예술 장르와 잠재적 향유자 간의 관계가 탄생, 발전, 정착되는 데에는 몇 가지 과정이 단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마추어 예술활동도 그 중의 하나이다.

대개의 예술은 집단 대중을 한꺼번에 소화하거나, 단기간에 군중을 애호가로 만들 수가 없다.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와 향유자들의 취향의 폭이 넓기 때문이며, 또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신과(마음에) 맞는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고, 관계가 발전, 확대되는 가운데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또 따로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 여러 종류의 동물이 어떤 대자연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섭생에 맞는 자연 환경을 찾아 정착하거나, 이동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절대 이런 과정은 단편적이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이를 몇 가지 과정으로 요약해 보겠다. 아래의 정리는 향유자의 변화에 따라, 공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려한 것이다.

1 향유 기회 확대 –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향유할 수 있게, 예술창작, 유통의 활성화: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활성화, 찾아가는 예술

10여년 전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반가운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삶 속에서 이미 예술의 가치를 발견

한 사람들의 일이다. 가장 먼저, 예술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겠지만,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고 전제하고, 전 생애를 두고 꾸준히 제공되는 향유의 기회를 생각해야 하겠다. 몇 세때 이뤄지는 한두 번의 지나가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아 시절부터 제도권 교육 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에서 시작하자. 여기에다 학교 밖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프로그램들의 제공은 그들의 향유 기회 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이때 교육자/예술가와 부모는 그들이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들 스스로에게 맞는 예술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예술을 통해 차이에 대한 인정, 존중을 익히게 된다.

우리 사회에 마련된 수많은 공공문화예술기관—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이 ‘연중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마련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질적인 책임’을 지는 가운데, 향유할(하는) ‘관객(개발)에도 전적인 책임’을 상시적으로 져야 한다. 이들의 설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 세대 등에게 우선적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야말로 예술향유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관객들에 대한 배려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과 배급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공공문화예술기관은 민간 예술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구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향유하게 하는, 예술 창작과 배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른 생산품과는 달리, 수요에 앞서 적절한 공급을 통해서 체험—예술과의 만남을 말한다—과 다양한 교육을 겸하면서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공급을 더욱 늘리는 매우 특별한 시장이 그곳이다. 투여되는 재화는 결국 ‘사람’에게 쓰여지는 투자이다. 이 곳에서 예술가들의 창작, 공연/전시의 기회가 늘고, 질적 우수성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키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향유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가치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사는 데 기여하는 곳이 된다.

종종 우리의 문화예술기관은 홀로 주관/제작하거나, 대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동으로 제작, 기획, 프로그래밍할 때에 적은 예산으로 더 많

은 양질의 작품을 관객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정착이 필요하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더욱 확대하여 안정적인 예술배급을 보장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의 대학과 각종 문화공간, 소외지역의 삶의 공간에 적합한 예술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정부(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예술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성장하게 해야 한다.

2 이해의 확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 제도권 교육 및 평생 교육,

향유+교육, 공공예술기관의 예술교육 의무화, 대학의 평생교육에 예술교육 지원 어린이, 청소년 또는 일반인이 처음으로 예술과 만났을 때, 향유의 기회와 더불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반되어야 하겠다. 제도권 교육 과정의 예는 위의 예로 대신하고, 일반 관람객에 대해서는 홍보의 차원을 적극화한다고 보면 된다. 사전 홍보를 더욱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제하게 구성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 관람 시간 또는 직후의 안내/교육도 중요한 홍보의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2012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듯이, 예술관람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설문에 전체 평균 78.1%가 호감을 나타냈다. 이 의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안내하는 일이 절실하다. 특히 기관람자들은 93.3%나 긍정을 표했다. 예술체험의 중요성이 극명히 드러난다. 비관람자—43.3%가 긍정—와 비교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비관람자를 관람으로 이끄는 사전 교육/안내가 이뤄질 때, 예술 향유의 수요는 급격히 향상될 것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문화교실’들,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육’ 과정들이 공공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된다면, 수강생들의 예술체험과 교육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예술 향유자들이 생길 것이다. 게다가 기초지자체 단위 복지차원의 모임과의 연결은 더욱 절실하다. 강사/예술가를 파견하여 교육하고, 예술체험으로 이어지는 활동은 아무리 늘어나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무료입장으로 개방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사회 각지에서 벌어지는 문화 교육과의 연장선상에서의 다양

한 프로그램 협력으로 (공공)문화예술기관이 향유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의무 중에 관객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실천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교육은 교육자들에 대한 예술교육, 예술 향유를 지향하는 교육,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돕는 교육, 예술가를 양성하는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이것들이 모두 여러 곳에서 살아날 때에 예술과 더불어 사는 삶,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문화적인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3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확대: 문화기관,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 지자체 문화예술기관에 아마추어 예술활동 기반 제공, 학교의 예술활동과 문화기관의 협력, 지자체의 예술활동 지원(공간, 재정)

예술체험과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관객들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현실적으로 손쉬운 것은 학교와 문예기반시설에서의 예술 실습의 확대일 것이다. 교육제도로 인하여 초, 중등학교 사회 내에서의 예술활동은 현재 극히 제한적이다. 국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큰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현행 예술인 강사풀 제도는 운영과 확대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유아, 초등 교육을 위한 예술계, 기반시설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예술향유와 교육을 접하는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나아가 예술 실습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간과 인력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 양자 간의 왕성한 교류를 통해 사회의 안정적인 잠재 관객, 동호인, 예술가가 개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공공문예시설에서 시행되는 상주 예술가(단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다. 그들은 사실 공연장/미술관과 공동으로 관객 개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스스로의 관객 개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객과의 만남, 작품 해설 등과 아울러, 여건이 형성된다면, 해당 예술분야의 아마추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아마추어 시민 예술가들이 학교나 문예기관에서 시작하여, 주거지역으로 활동무대를 확대하면서, 서로 다른 시민들,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 활성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발표할 예술을 중심으로 모이고 활동하면서, 이질성이 더 큰 그들의 가족, 친구, 이웃이 어울릴 계기를 갖게 되고, 각각 서로의 일상 문화가 아닌, 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시각을 중심으로 그들은 편안하게 소통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회야말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가 구획한 계층,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소통을 하게 한다.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을 위한 예술의 역할 – 국제문화, 소수 문화

우선 가장 먼저 한국대중문화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를 어떻게 다양한 외국문화와 우리가 소통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가 떠오른다. 본인이 파리 한국문화원장 재직시에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이 과정에서 우리 예술의 역할을 정리한다. 2011년 K팝 파리 공연과 싸이의 성공을 계기로 이 분야의 약진을 실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긴 세월 동안 한국의 문화예술이 유럽 특히 프랑스에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가운데 안정적으로 파리 공연이 성사된 것이다. 연 수백 건에 이르는 다양한 한국문화예술활동과 이를 즐기는 수많은 현지 관중들, 급격히 늘어난 한국학 전공자, 한국어 수강생들, 파리에만 백 개가 넘는 한식당을 채우는 현지인들(80% 이상은 현지인)이 K팝 공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이 사건 이후, 이제는 수십만에 이르는 K팝 애호가들과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 문화와 다양한 예술이 더욱 더 많이 제공될 여건이 나아졌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중문화는 유행처럼 폭발적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짧기 쉽다. 더욱이 유럽처럼 다양한 예술이 대중들에게 향유되는 곳에서는, 새롭게 늘어난 한국에 우호적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예술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또 공동으로 창조되고 하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앞으로도 긴 세월동안 깊이 있는 상호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4년간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음악, 연극, 무용, 문학, 영화, 미술 등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놀랄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에서는 대상국의 문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방법을 개발하면서 양질의 우리 예술이 소개될 때에, 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대화는 빗물이 옥토에 스며들 듯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 사회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 한국사회의 대중음악

(팝), 클래식음악, 미술, 체육처럼. 이렇게 문화 간 소통이 이뤄지고 나면 어떤 국제적인 정치, 경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존중과 신뢰가 형성된다.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의 나라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른바 한류라 부르는 반가운 현상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국제교류에 활용해야 할 적기가 지금이다. 그러면 K팝이 그렇듯이 한국 예술은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리잡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한국 예술가(작품)들과 세계의 예술가들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예술계에서는 국적을 따지는 일은 촌스러움 이상의 비문화적인 태도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다문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탈북자 등 소수자들의 문화는 우리 땅에서도 일상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여 그들이 자주 소외되고 있다. 10여 년 전,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회의에서 이주 외국인, 외국인 동반자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빨리 배우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들 주변으로 모임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예술활동을 한예종의 아시아 장학생들로 하여금 도와주는 가운데, 그들의 예술을 우리가 경험하고 즐기는 일, 학교 안, 밖에서 그들의 문화예술축제를 여는 일도 함께 했었다. 일반인들에겐 별난 구경 거리였을지는 몰라도 그들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공공문화기관들이 연중 상시적으로 소수자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과 어울려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에,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편안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다.

예술 감상과 창작을 할 때에는 문화의 차이가 오히려 장점이 된다. 시각과 감성이 더욱 풍요로워질 뿐 어떤 장애도 없다. 다문화가 어울려 더 풍성한 예술, 서로 다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예술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눈과 마음을 키워준다. 서로 다른 가치가 많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넉넉하고 평화로운 일인가.

— 나가며 — 예술을 통한 소통

예술 체험과 이해, 향유, 예술활동은 우리의 기계적이고 각박한 현실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간의 벽을 느낄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으며, 공유하는 새로운 가치가 탄생되며 또 함께 이뤄내는 기쁨이 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해(利害)와 잣대 —예를 들어 효율성, 경쟁성 등—를 앞세우면, 또 다른 현실의 압박으로 모든 것이 상쇄될 것이다. 예술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고, 얘기 나누고, 여가를 함께 보내는 일이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대와 압박받는 현실 너머에 있는, 서로 공유할 일상의 기저에 깔린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는 일일 것이다. 예술 창작의 바탕에는 빛, 색, 형태, 자연, 우주, 가상의 인간과 사회가 있기에, 현실 사회적 차이를 잠시 벗어나 우리를 꿈꾸고 상상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 스스로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도 한다. 예술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공해 속에서 신선한 숨을 쉬게 하는 또 다른 환경이다. 예술을 통해 새 숨을 쉬다 보면 사회문화적 차이는 덧없는 비교에 불과함을 느끼게 된다. 몇 년 전 내게 강의를 요청하며, “실패한 예술가에게서도 그 사회의 기저에 깔린 문제의식과 지향하는 미래를 느낄 수 있으니”, 한국 지사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예술가에게 강연을 듣고, 예술작품을 만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프랑스 기업인들의 말이 생각난다. 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해 한국인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4년간의 문화원장 시절에도 수많은 프랑스 정치인, 기업가, 고위공무원을 만났을 때, 그들은 늘 예외없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고급 샴페인보다 한국 소설책 한 권, 영화 DVD 한 장에 그들은 기쁜 답장을 보냈다. 그들이 그랬다. 문화예술을 통한 국제적 소통은 상상보다도 더 자유롭고 가치로웠다. 감히 말 건네기도 힘든 거물급 인사(?)들과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물론 한국문화원 단골 노숙인들도 문화예술을 통해 —공연, 행사에 초대, 얘기 나누기 등—편안한 손님이 되었다. 문화예술을 통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읽고,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동참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통의 기반이 아니겠는가. ◆

문화예술 대토론회

예술정책, 현장과 소통하다

2013.04.23 - 04.24

대학로 예술가의집

참석대상: 총 120여 명

-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 예술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종사자 등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